

3월 주총 향한 진군

지난달 이사회서 50% 감자결의,

주총서 통과위해 노조 총력투쟁키로

인천일보 전 직원의 염원이었던 감자가 전격 결정됐다.

인천일보 이사회는 지난 2월24일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정기이사회를 열고 자본의 50%감자를 결의했다.

인천일보 이사들이 50% 감자를 결정함에 따라 그 동안 지지부진 했던 비상대책위원회의 증자 계획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러나 감자여부는 오는 30일 있을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되므로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이날 참가한 황호수 사장직무 대행 등 비상대책위는 전 직원의 '회사 살리기 결의문'을 이사회에 제시하는 등 배수의 진을 친 결과 감자 결의를 얻어냈다.

비대위는 "직원들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부장단이 전원 사표를 제출하고 모든 직원이 한 직급씩 낮췄다"며 "모든 직원들의 결연한 의지를 이사회에 보여준 결과 이같은 성과를 얻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대주주인 신화수, 장재춘씨 등은 "오는 30일 개최될 주주총회에서 감자가 결정되려면 비상대책위원회가 좀 더 만족할 만한 회사 살리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총의 감자결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암시했다. 다른 이사들도 감자에 따른 직원들의 고통분담 요구와 매년 쌓이는 적자 해소의 구체적 방안을 요구해 감자가 실질적으로 되기까지는 상당기간 진통이 예상된다. 이사회는 특히 이날 결정된 감자 결정을 주주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비대위의 소주주 설득 작업이 최대 관건인 상황이다.

이사회에 참석한 신화수 사장은 "감자는 원칙적으로 합의한다"며 "그러나 증·감자에 참여하는 비대위가 제대로 못한다면 주총에서 유보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호수 사장직무대행은 "모든 직원과 합심해 회사 살리기 방안을 정확히 소주주에게 전달할 것"이라며 "주총에서도 꼭 감자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러나 인천일보 노조는 주총에서 이사회 결의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결정이 번복될 경우 대외 연대투쟁 등 총력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찬흥 인천일보 노동조합 위원장은 "직원들이 없는 허리띠를 더 졸라매 뼈와 살을 깎는 결의문의 채택했다"며 "그런데도 감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더 이상 물러설 공간이 없으므로 총력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신문발전법 국회본회의 통과

참지역언론 위한 '첫걸음'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이 지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신문사들은 정부가 출연한 기금에서 지원을 받게돼, 경영여건과 유통구조 개선, 인력양성 및 교육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터졌다.

지역신문들은 그동안 중앙일간지의 지방시장 잠식과 신문사 난립 등으로 고사위기에 처하는 등 지방화·분권화 시대와는 동떨어진 언론환경에 처해 있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6년간 문화관광부 산하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 등의 출연금으로 지역신문발전기금

을 만들도록 하고 있다.

법은 발행부수공사(ABC) 가입과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절반이하이며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신문 등 요건을 충족한 신문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배주주 및 발행인·편집인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6년 한시법인 법안은 세부지원기준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미뤄놓고 있어, 앞으로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해 시행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곡절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갈길이 멀다

“인천일보 주주들의 50% 감자 결의, 지역신문발전지원법 국회통과.”

인천일보를 둘러싼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이사회에 50% 감자 결의로 경영정상화에 첫발을 내디뎠고,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의 국회통과로 재벌·족벌 언론의 그늘에서 벗어날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그러나 삼폐인을 터뜨리기엔 너무 이르다. 우선 50% 감자를 보자.

일단 지난 2월 이사회에서 감자 결의 뒤 신화수 전 사장이 “10억원을 출자하고 최창민 전 이사를 앞세워 다시 인천일보를 운영하겠다”고 말한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이는 언제고 틈새가 있으면 다시 인천일보에 들어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를 미뤄볼 때 3월 주총에서 상황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결의는 단지 결의로 끝났을 뿐 결정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인천일보 직원들은 회사 경영정상화를 위해, 내고장 언론을 사수하기 위해, 내 소중한 삶의 터를 지키기 위해 직급까지 한 등급씩 강등하며 가냘픈 허리를 더욱 바짝 졸라댔다. 경쟁지와 평균 임금이 40만여 원씩 나는 상황에서 임금을 더 내렸으니 영양실조에 걸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작은 부분일지언정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가정 아래 용기있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제 인천일보 직원들의 뒤편에는 가파른 낭떠러지만 있을 뿐이다.

우리 대주주인 장재춘, 신화수 전 사장의 언론인으로서의 도덕성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주주총회에서 대주주의 권한으로 이사회에 결의를 뒤집을 경우 또다시 고통스러운 가시밭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 그 길은 그러나 인천일보 직원들뿐 아니라 2인 대주주에게도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다. 비근한 예로 경인방송의 모 대주주의 경우 직원들의 반대로 회사에서 물러난 뒤 그 어느 곳에도 발을 붙이지 못한 채 어른으로서의, 또 선배로서의 대접을 못받고 있다. 이는 회사 전체로도 불행한 일이지만 개인에게도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의 경우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머나먼 여정’이라고 봐야 한다. 법은 통과됐지만 지원 대상과 기준을 놓고 논란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법은 발행부수공사(ABC) 가입과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절반 이하이며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신문 등 요건을 충족한 신문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지원기준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미뤄놓은 상태다. 지원형태가 어떤 식으로 될 지 모르나 일단 지원을 받는 언론사는 국민의 세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그런 지원이 호락 호락 집행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

이에따라 우리가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내부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편집국장 직선제, 시민 편집위원회 운영 등 인천일보는 다른 언론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모습을 가진 게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노조는 거기에 안분지족할 생각을 추호도 없다. 우리 노조는 계속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 진정한 인천·경기 시민들의 신문이 되는 길을 찾아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조합원들은 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선정이 되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만에 하나 선정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단단한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쨌든 일단 우리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해야 한다. 따라서 세부지원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선정 기준의 최우선 순위가 언론사의 개혁성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당히 자신있게 지원받을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 나가자.

자 이제 조금 부풀었던 부푼 가슴을 추스리고 담담한 마음으로 현실을 직시하자. 그래서 주총에서의 감자 결정과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선정이란 땀의 결실을 일궈내자.

그 길을 향해, 동지들이여 ‘함께 가자 우리 이 길’.

반쪽자리 성과 주총 결정까지 긴장 늦추지 말아야

50% 감자의 의미

인천일보 50% 감자는 반쪽자리 성과다. 이사회에서 감자를 결정하는 대신 직원들의 고통분담, 매년 쌓이는 적자부분 해소 방안 등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사회에 50%감자 결정에 따라 오는 30일 개최될 인천일보 주주총회에서 감자를 이끌어내는 것은 이제 비대위와 인천일보 전직원 몫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이사와 주주들은 적자 경영책임에 대한 부분을 직원들한테 돌리는 모습을 보여줘 주총에서 감자 결정을 이끌어내기까지는 평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4일 이사회에 참가한 한 이사는 경인일보와 인천일보의 임금 차이를 각 회사의 매출과 비교하며 당연한 듯이 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사회에서 감자 결정된 사항을 주총에서 발표하지 않는 속내는 인천일보 전직원의 행동을 지켜보겠다는 의미다.

또 이 날 열린 이사회에서 증자에 대한 부분은 결정하지 못했다. 증자는 회사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 가치가 있으면 당연히 팔려오는 것으로 이사회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는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자본 잠식 상태였다. 최대 주주인 장재춘 사장과 신화수 사장이 경영을 했을 때 이 재무구조를 타파하지 못했다.

그렇게 따진다면 오히려 감자를 요구하고 회사를 살리는 몫은 주주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객이 전도된 모습으로 인천일보 직원들은 끊임없이 감자를 요구했다. 인천일보 전직원들이 사랑하는 삶의 터전이 바로 인천일보이기 때문이다.

인천일보라는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오는 주주 총회에서 50% 감자 결의가 최대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비대위를 중심으로 인천일보 전직원과 노조는 주주총회에서 감자결의가 무산될 경우를 대비하고 증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3일 개최된 인천일보 전직원 회의에서 황호수 직무대행이 주총에서 감자 결의가 안될 경우 ‘돌출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발언은 의미 심장 하다.

특히 비대위와 노조는 이번 주총의 감자 결의를 인천일보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카드로 인식, 감자가 되지 않을 경우 특단의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을 막기위해 비대위는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소액주주들을 찾아가 설득을 펼친다는 전략이다.

비대위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항간에서는 횡령으로 해임된 전 이사와 전 대표의 복귀설이 나돌고 있어 비대위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에 비대위와 노조, 전직원은 주총에서의 감자 결의 결과를 지켜보고 결연한 의지를 주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주총이 열리는 회의실 앞에서 진을 치겠다는 의지다.

이제 인천일보를 살리기 위해 주사위가 던져졌다. 인천일보 전직원의 단결된 힘으로 반드시 마지막 카드를 잡아야 된다.

지역신문발전 지원법 통과 전망

한 고개 넘었지만 ‘첩첩산중’

세부 지원 기준 남아 있어 선정 불투명, 개혁에 박차가 해야

문화관광부 산하에 기금을 만들어 일정 자격을 갖춘 지역신문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법안이 2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지난해부터 우여곡절을 거쳐 이달 23일 문광위와 25일 법사위를 거쳐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하지만 애초부터 지원대상과 기준 등을 놓고 논란이 컸던만큼 입법 취지대로 시행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법안의 핵심인 세부 지원기준을 규정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작업이 남아 있다.

지원대상과 지원방법을 결정할 별도의 기준 마련에 이해 당사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법안 추진 과정 _ 지방분권연대, 한국기자협회, 바른지역언론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지역언론학연합회, 언론정보학회 등 8개 단체의 연합체인 ‘지역언론개혁연대’는 지난해 7월 국회에 지역신문발전지원법(가칭)을 제출하면서 9월 정기국회 내 법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 파행으로 지역언론 지원관련 법안처리는 무산됐다. 앞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김성호 의원(당시 통합신당, 현재 열린우리당) 등은 지난해 10월18일 여야의원 27명의 동의를 얻어 지역신문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광부 산하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안은 지역언론개혁연대가 마련한 법안을 수정한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은 지난해 9월22일 자체적으로 ‘지방언론지원에관한특별법안’(한나라당 고흥길 의원 대표발의)이라는 명칭으로 정기간행물법에 대한 특별법 형태로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같은 당 목요상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열린우리당 김성호 의원, 한나라당 고흥길·목요상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개 법안이 절충돼 현재의 법안이 마련됐다.

기금 선별 지원 _ 법안은 중앙일간지의 시장 잠식, 신문사 난립 등으로 고사위기에 처한 지역신문의 정상화와 여론 다원화, 지역사회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산하에 정부 출연금 등으로 기금을 만들어 일정 기준을 갖춘 신문을 지원하도록 한 6년 한시법이다. 문화관광부·국회 추천인사 각 3인과 신문협회·기자협회·언론학회 추천인사 각 1명 등 9명으로 구성될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기금의 운용·지원 등을 심의한다. 현직 언론인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지원대상은 정기간행물법에 등록된 매체 가운데 일부 시·도 또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신문이다. 이 가운데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고,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절반 이하이며 발행부수 공사(ABC)에 가입한 언론사 등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했다. 지배주주 및 발행인·편집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지역신문은 전년도 경영실적, 재무상태 등을 문화관광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금의 용도는 지역신문의 경영여건과 유통구조 개선, 인력양성 및 교육·조사·연구사업 등으로 제한했다. 우회장 지역언론개혁연대 사무국장은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소위 조종동이라고 부르는 서울의 몇몇 언론이 여론시장을 장악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여론의 왜곡 전달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지역사회를 감시 비판해야 하고 지역의 올바른 여론을 수렴해야 할 지방언론이 고사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이 떠 안게 된다”며 법안의 당위성을 밝혔다.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 _ 지역언론개혁연대의 절충안에는 지원기준을 세분화한 ‘우선지원’ 조항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문화관광위는 이같은 세부기준은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도록 했다. 현재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지역일간지는 120여개, 이 가운데 실제로 발행되는 신문은 70여개로 파악된다. 지역주간지의 경우 등록매체는 400여개, 실제 발행되는 매체는 230여개 정도이다. 일차적인 지원대상에 300여개 매체가 포함되는 것이다. 인천경기 지역은 일간지의 경우 20여개가 등록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언론개혁연대는 당초 노사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편집규약의 제정·시행, 근로기준법 준수,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건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을 우선지원 기준으로 명시했다. “퍼주기 식 지원보다 신문사들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내부 개혁을 통한 때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나온 규정들이다. 그러나 이들 규정이 이번 법안에서 빠지고 이 후 시행령으로 미뤄짐에 따라 향후 구체적인 지원 기준 마련을 위한 시행령 제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언론개혁연대 장호순 정책위원장은 “지역언론발전이라는 취지에 맞는 시행령제정을 위해서는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위원회 구성의 경우도 정치권의 나눠먹기가 아닌, 법안취지를 살리고 개혁을 유도·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월대보름 '척사대회' 성료 전직원 참여, '바이러스' 팀 우승



2004년 정월대보름 '척사대회'가 전 직원의 참여속에 성황리에 끝났다. 지난달 6일 정오부터 시작된 이번 척사대회는 크게 윗놀이와 제기차기로 나뉘어 진행돼 인천일보 전직원이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각 본부와 부서별로, 마음 맞는 직원들끼리 구성된 10여개 팀이 출전해 열린 윗놀이 대회는 예선전에서 승리한 전산팀, 편집팀, 문화·체육팀이 결승에 진출했다.

우승은 전산팀 '바이러스'가 편집 기획팀원들로 구성해 출전한 '편집'과 문화·체육 부원들로짜여진 '얼라리'에게 완승을 거두며 우승을 차지했다.

남·녀 별로 실시한 제기차기 대회에서는 전산팀의 정영섭씨가 1등을 차지했고, 여자부에서는 겨울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나온 김수정양이 우승을 차지했다.

한 명의 팀원도 빠지지 않고 열성적으로 참가한 제작팀은 직원들간의 단합이 가장 좋은 팀에게 돌아가는 '분위기(팀웍)'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편 전직원간에 막걸리와 약간의 간식을 나눠 먹으며 그 동안 짐체돼 있던 회사 분위기를 바꾸며 즐거운 한 때를 마무리했다.



동아리 활동 사진첩

사진 동아리



사진 동아리

등산 동아리

마라톤 동아리



'2004년 총선보도 이렇게 합시다' 토론회

“유권자 중심 보도 지향해야”

정책평가, 수수정당 목소리도 담아주길 ‘한목소리’

4·15 총선을 앞두고 공정한 총선보도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 2월13일 인천문학경기장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2004년 총선보도 이렇게 합시다-인천 경기지역 편집 보도국장과의 대화'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선 단순 보도 위주의 경마식 보도를 지양하고 유권자 중심의 보도준칙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인천·경기 지역 언론사의 공동여론조사 제안과 지역내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모니터단'을 구성하자는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인천·경기 지역 신문·방송사와 학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는 한국언론재단과 언론개혁 시민연대가 주최하고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한국프로듀서연합회가 공동 후원했다.

토론자들은 이날 그동안 지역언론이 유권자의 참여와 반응을 배제하고,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평가보다는 원내정당 중심의 단순보도식의 경마식 보도에 치중했다고 지적하고 유권자 중심의 보도방식을 지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자들은 또 이런 현상이 지역언론의 인적·재정적 한계에서 비롯된 현상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언론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가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인천대 이수범 교수는 발제를 통해 “그동안 지역언론이 보여준 보도관행은 유권자의 냉소주의를 부추기고, 후보자의 공약 남발을 불러왔다”고 지적하고 “총선보도에 있어서 지역언론은 시민 저널리즘에 근거해 유권자가 생각하고 있는 지역현안과 이슈를 발굴하며 유권자를 보도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민연련 이주현 사무처장도 “이번 총선에서 지역언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길상 인천연대 사무처장은 “올해는 정당에 대한 투표까지 이뤄지는 1인2표제인만큼 ‘누가 어땠다’식의 보도보다는 정책대결을 유도하는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며 “민심과 관련한 심층보도에도 유권자들은 갈증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원내 정당중심의 보도에 치우치지 말고 정책을 평가하는 한편 수수 정당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선 총선보도가 아닌 언론사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도 쏟아졌다.

정영태 인태대 정의과 교수는 “눈과 머리 역할을 해야하는 게 언론의 몫인데 현재 언론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이는 보도자의 가치관과 이해관계, 즉 기자와 소유주, 기자와 광고주의 부적절한 관계에서 연유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도 당사자인 인천·경기 지역 편집·보도국장들은 개선을 약속하거나 현실상 어려운 점을 토론했다.

김규원 인천일보 편집국장은 “일간신문의 특성상 그날 그날의 이슈를 따르게 되는데 거대 정당들이 이슈, 즉 뉴스 거리를 많이 만들어내 경마식보도, 거대 정당위주의 보도가 이뤄질 수밖에 없어 항상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김 국장은 “이 때문에 인천일보사에서는 2003년부터 각계 시민대표들로 이뤄진 시민편집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며 “이번 총선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인천·경기지역 언론사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좌담·토론회의 공동개최 등을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송광석 경인일보 편집국장은 “총선보도는 선거일 시작에서 투표일까지 이뤄지며 이 기간 기자들을 대거 투입하지만 적은 인력, 과중한 업무의 지방 언론사의 여건상 세세히 보도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검증 기사의 필요성을 절감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이어 열린 실무자 워크숍에서는 각 지역별로 '공동모니터' 성격의 조직을 구성해 총선이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뜻을 모아 현재 이 기구가 운영중이다.

신학림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총선은 물갈이가 아닌 판갈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수십 년간 부정부패로 기득권을 누려온 족벌, 재벌 언론인 조중동과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보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실위보코서

정책대결 기사 아쉬워

후보동정·정당동향 단순보도 많아, 유권자 목소리 담은 기사 보강해야

지난 2월 한달간 인천일보의 총선 보도는 특정당에 편중된 모습을 보였다. 보도 내용 또한 공천~정선을 둘러싼 인물 중심 보도가 주를 이뤄 아쉬움을 남겼다.

인천일보 민주언론실천위원회가 지난 2월 한달 간 인천일보가 보도한 총선관련 기사를 분석한 결과, 열린우리당 관련 기사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순이었다. 이는 정치면인 3면과 1면 보도내용을 분석한 결과로, 정치면인 3면의 경우 총 보도 건수는 41건으로 이 중 열린우리당이 19건(46.3%), 한나라당이 14건(34.1%), 민주노동당이 5건(12.2%), 민주당이 3건(7.3%) 였다.

1면의 경우는 모두 6건의 기사가 보도됐는데 역시 열린우리당(3건), 한나라당(2건), 민주당(1건) 순으로 기사 게재 건수가 많았다.

총 보도 건수로 살펴봐도 열린우리당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순이었다.

이 밖에 13면에 보도된 총선관련 기사는 시민단체의 낙선 대상자 명단 발표 등 낙선운동과 관련된 기사가 가장 많았다. 한나라당의 서청원 의원 관련 기사나, 각 당이 공천경선과정에서 겪는 내용을 다룬 기사도 있었다.

각 당의 총선관련 기사의 내용은 대부분 인물중심 보도형태를 띠고 있어 아쉬움을 보였다.

가장 많이 보도된 열린우리당의 경우, 이상경 판사 영입 기사를 시작으로 영입인사와 관련된 기사가 보도되거나, 현역의원의 행사 보도, 정선 후보자 근황 등에 대해서 주로 보도됐다.

한나라당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특정인물의 공천여부를 다루거나 중앙당의 공천작업이나 이를 둘러싼 지역내 반응이 주였다.

민주당은 공천 보도 이후 지면에서 배제됐고, 이후 안산과 수원지역내 각 후보자들의 동정만 보도됐다. 특히 인천지역의 경우 아예 지면에서 민주당 관련 소식을 찾아볼 수 없었다.

건수 면에서 민주당을 조금 앞선 민주노동당 관련기사는 주로 경기도 기사가 게재돼 아쉬움을 남겼지만 다른 당과 다르게 FTA 비준 반대나, 비례대표 확대 촉구, 정책합동토론회 등 국정과 지역 현안, 선거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묘한 대조를 보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총선보도에 있어 특정한 정당에 치우치기 보다 각 당에 고르게 배분을 하는 한편, 신문지면은 후보의 동정이나 정당의 동향보다 정책대결의 장으로 만들어 가야한다는데 민실위 위원들은 의견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소수정당에 대한 지면배려와 지역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도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즉,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하면서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도 등에 치우쳤지만 앞으로는 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과 현안이 무엇인지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일보 민실위 2월 이달의 기사·편집상 선정

기사상 - '수도권 매립지...' '김포대 입시부정'

편집상 - '차라리 중구로 돌아갈래'

인천일보 민실위는 2월 이달의 기사상에 '수도권매립지 10년 비극은 시작됐다'(박정환 이은경 노형래) 시리즈와 '김포대학 입시부정'(변승희 홍성수)을 공동 선정했다. 편집부문은 27일자 19면 '차라리 중구로 돌아갈래'를 편집한 조은주 기자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수도권매립지 10년 비극은 시작됐다' 시리즈는 침출수로 인한 어장피해를 처음으로 제기, 특종 보도한 점을 인정받았으며, '김포대학 입시부정' 역시 사학 비리를 낱낱히 파헤친 특종 보도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들 기사들은 특히, 단발성 보도에 그치지 않고 수차례에 걸쳐 지

면에 반영되고 있어 비리나 의혹에 대해서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담당 기자들의 기자정신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편집부문에서는 사진선택과 색감 조화가 뛰어났던 4일자 20면 '와 인통에 와이이 남아있을까'(윤신옥)와 환경을 생각하는 공무원의 염려가 잘 표현된 18일 15면 '오늘도 시화호에 간다'(김하나)도 수작으로 꼽혔다.

그러나 독자의 눈을 사로잡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스트레이트면에서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영종 용유 주민들의 불만을 간결한 문구로 표현한 '차라리 중구로 돌아갈래'로 최종 의견이 모아졌다.